5년 노선논란 종지부…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비상'

호남KTX 무안공항 경유 기대 효과

2012년부터 노선 수차례 바뀌어
무안-광주공항 통합도 탄력
이용객 10배 가까이 증가 기대

광주송정~목포 구간 경유 노선 갈등으로 인해 착공이 3년여 동안 지연됐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가 정치권, 정부 부처 간 조율 끝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차별과 소외의 상징이었던 '눈물의 호남선'이 우여곡절 끝에 2단계 노선 확정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반쪽 고속철도'라는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내년 중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애초 KTX 2단계 사업은 애초 2015년 착공해 올해 완공될 계획이었다.

◇무안공항 경유까지 우여곡절=호남고속철도는 단계적 추진 계획에 따라 전체 구간 중 오송~광주송정 구간만 2015년 개통됐다. 앞서 2004년 개통된 경부선에 비해 11년이 늦어지면서 대표적인 영·호남 차별의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 광주송정 이남은 그동안 노선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지면서 '반쪽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는 나주역 경유와 무안공항 경유 등을 놓고 지역 내 이견과 갈등이 촉발되기도 했지만, 이를 빌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2단계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애초 개통 예정(2017년)에 비해 8년이 늦어지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06년 8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광주송정~목포에 2조6616억원을 들여 56.0km 고속철을 건설하는 내용이었다. 이동 소요 시간은 16.5분으로 설계됐다. 2012년 8월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는 노선에 무안공항이 등장했다.

광주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에 닿는 72.2km 구간으로 노선이 바뀌었다.

사업비는 3조1536억원, 소요 시간은 20.5분으로 예상됐다.

이후 노선은 광주송정과 무안공항 사이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를 포함해 총 77.6km로 수정됐다. 기존선 33.7㎞를 개량해 고속화하고 43.9㎞ 신선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사업비는 2조4731억원으로 줄고 예상 소요 시간은 26분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광주~목포 66.8km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km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선 활용 구간이 대폭 늘어나 예상사업비는 국토부안(2조4731억원)보다 1조1304억원이 줄어든 1조3427억원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KDI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들어갔다.

그나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광주 송정~나주 고막원 구간은 지난 1월 우선 착공했다.

노선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국회는 지난 3월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역 정·관계에서는 무안공항 경유 촉구 여론이 비등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무안공항 활성화 기대=무안공항을 경유하기로 노선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침체일로에 빠졌던 무안공항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연결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 무안공항은 서남권 거점공항의 면모를 차츰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광주공항과 통합까지 이뤄진다면 접근성 향상과 공항기능 집약의 시너지가 획기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는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무안공항 국내선 확대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 광주공항의 제주·김포 노선을 모두 옮기면 무안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237만3000명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이용객이 32만명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비약적인 증가다.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공항 연계 철도망은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요 거점 국제공항은 연계 철도망을 갖췄다.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철도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6160억원 사업비가 반영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 공항 접근 시간은 평균 52.7분이지만 무안공항은 평균 88분이어서 이용객의 외면을 당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접근성이 낮아 전남 여수·순천 주민은 김해공항, 전북도민은 청주공항을 이용했다"며 "무안공항 활성화 외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ㅁ' 자형)과 연계해 남해안철도(목포~부산), 서해안철도(인천~목포)와 연결망을 구축하면 서남해안권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국제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민주당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현직단체장·지방의원 평가 돌입

광주 43명·전남 188명 대상
시·도당 13일까지 평가작업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 30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인 광주지역 구청장 ·지방의원, 전남지역 시·군수와 지방의원의 평가 자료 제출을 마감했다. 평가 대상자들은 개인별로 부여된 아이디를 통해 의정활동결과 등을 입력했으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3일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평가 대상자들은 광주의 경우 구청장(서·남·광산구) 3명과 시의원 12명, 구의원 28명 등 모두 43명이다. 광역단체장인 광주시장의 평가는 시당에서 하지 않고 중앙당에서 한다.

임우진 서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1시간씩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현직 기초단체장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도 이날까지 이뤄지며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광주지역은 3선에 묶인 송광운 북구청장은 "향후 정치 행보 계획이 없다"는 의지가 강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전남의 경우는 현역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145명 등 모두 188명이다. 도당 평가위는 단체장의 경우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직무활동(350점)·공약이행(200점)·자치분권활동(150점)·여론조사(300점) 항목을 평가한다.

지방의원의 경우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광역의원, 당 소속 의원수 10명 이상인 기초의회(순천·나주·광양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한다. 평가위원회는 기초단체장 평가를 위한 '지역의 미래비전과 성과발표'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 성과발표는 오는 12월 4일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축수산품 선물비 10만원 유지될까

권익위 청탁금지법 가액조정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했다. 전원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특히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할 때는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다들 동의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전원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개정안 조항은 '선물비' 문제였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고,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외부 위원들의 반대가 많았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공품을 구입할 때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체 가공품으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